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모색

도·시·군 간 공공갈등관리업무협약을 중심으로

고 승 희 _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추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비단 어느 한 지역 또는 기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자치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나타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조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 방안들도 강구되고 있으나 이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수단이 필요시 되며 협약은 행정행위를 보충하는 효율적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

에 각종 현안들을 발굴하여 건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충남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조정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충남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업무들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히,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업무는 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시·군 협약을 통한 대응방향을 살펴본다.

2. 협약의 개념과 요건

1) 협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만 현대 행정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수혜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 관계에서는 업무의 중복 뿐 아니라 추진 주체에 대한 이견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첩되는 권한과 이익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사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적어도 협력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는 행정수행의 효율적 체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협약은 광의와 협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서 협약은 기관 간 사무처리의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된 계약적 형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사무의 공동처리를 포함하여 사무위탁, 협의체 설립, 인사 및 정보교류,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적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 즉, 협약은 기관 간 공동적 관련 사무를 계약의 형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군 협약사무의 대상과 근거

도시·군 간의 협약은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분권과 협력은 반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로서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행정주체 간 연결고리로 협약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군 간 협약을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처리가 곤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공동처리함으로써 기능과 사무배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협약의 대상사무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 간에 있어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로서 공동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광역의 사무인지, 기초의 사무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사무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 추진 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역 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도시군간의 협약에 관한 제도적 근거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7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14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

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절차로는 먼저, 협력대상 사무를 판단하며, 업무협의를 한 후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대상사무 판단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 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역 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가 대상될 것이다. 업무협약에 있어 진행방법 및 절차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비용부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 금액, 집행방법 등의 논의를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MOU 체결 및 협의동의 공문서 발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도·시군 협약의 성립요건 및 이행

일반적으로 협약은 당사자 간의 협력, 특히 의사의 합치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다. 그러한 점에서는 공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먼저, 권한상의 요건의 경우 협약 자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에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별 협약의 당사자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입법적 규율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협약의 의미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한 협력적 사무수행인 점, 그리고 해당 사무에 기본

적인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으로 인해 권한상의 요건문제는 엄격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협약형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을 명백히 한다는 의미에서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협약에 의해 공동처리되는 사무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협약의 절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사무의 내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산을 수반하거나 조직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게 이익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협약에 앞서, 협약을 통한 공동처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적 타당성 측면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도와 시·군은 협약의 당사자로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협약은 계약의 본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사법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력강제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그러나 일반적 공법상 계약과 달리, 협약에 의한 사무처리는 본질적으로 공행정의 수행방식이며, 행정주체간의 법률관계인 점에서 본다면, 협약이 가지는 의사합치적 본질에만 근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약의 이행 및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약에 있어서도 그 본질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변경 및 해제의 가능성은 일반적 계약법적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협약의 본질이 지방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와 시·군간 신뢰관계라는 차원에서만 변경·해제를 논할 수 없으며 주민의 이익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 도-시군 간 협약사무 발굴의 기준(원칙)

도와 시·군간의 협약은 지방자치의 본원적 의미인 민주적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수평적인 협약이다. 이에 협약과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 및 비전이 제시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제중심으로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신규 사무분야 또는 기존 사무에 보충적으로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분석과 적정한 범위설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필요가 있으며 협약사업의 실제 협약의 체결에 앞서 구체적 지표에 의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에 몇 가지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인바, 가령, ① 협약사업의 명확한 목표설정, ② 서비스 제공 방법과 서비스 수준 (가급적 계량화) , ③ 총비용 과 분담비용, ④ 협약의 경제적, 행정적 운영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약사무의 방향은 첫째, 성과창출 가능성으로 도·시·군 간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 또는 사무이다. 둘째,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으로 충청남도 지역발전 정책과의 부합성, 구체성,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분야 또는 사무이다. 셋째, 창의성으로 기 추진되던 분야와 유사·중복되지 않는 분야 또는 지역 특성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또는 사무이며 마지막으로 연계 및 협력성으로 도·시·군 간 합의 수준, 사업 추진체계, 연계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협약사무 발굴의 방향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의 원칙은 첫째, 도·시·군간 민주적, 자율적인 협약체결로 행정주체 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체결해야 한다. 둘째, 보충적 수단으로서 기존의 법적 시스템만으로는 상호 협력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협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분권적 상생협력발전 추구로 중앙 의존형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분권적, 자생적 지역 간 상생 협력과제의 발굴로 실천적인 지방자치 구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발굴과제의 방향 및 원칙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기 준	내 용
통일성	도-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할 사항 도-시·군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
파급성 (효과성)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적인 사항 도-시군 상호협력의 시너지효과가 큰 사항 기타 도-시군 공동추진이 효과적인 사항 등
보충성	도-시군 사무 중 단독추진 시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사항
활용성	주민생활권 단위로 생활시설의 공동활용이 효율적인 사항

3.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1)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협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갈등의 지속적 분출과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이해관계가 다원화 되면서 각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으며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적·사법적 해결방식으로는 갈등해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른 시민 참여·권리의식 향상으로 각종 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갈등은 지역 간의 비선호시설의 입지, 철도역사 등 선호시설 건립을 둘러싼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지역 간의 분열을 초래 할 우려가 크므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갈등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능률편향적인 정책과정을 시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즉 갈등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필요하다.

셋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복잡화된 갈등의 원인은 갈등의 주체인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에서 비롯된다. 효과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달성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토대로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초래 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관리·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갈등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과도한 비용 지출은 물론 행정 신뢰성 결여로 지역주민 불신 초래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요구된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갈등 해소 역량이 미흡하여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어 갈등전문 인력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섯째, 갈등 사안이 광역화 되어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갈등의 양상이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일정지역을 초월하여 광역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 간의 경쟁구도는 물론 지역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발생되는 공공갈등 증가로 지역 간의 분열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컨트롤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갈등관리의 문제와 현상은 어느 한 기관 및 지역 단일의 대응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며 도와 시·군 모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에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사업의 주요 현황

① 갈등관리 정책 및 현장지원

충청남도는 2014년 12월 30일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 3943호)를 전면개정·공표 하였으며, 현재 도내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로서 제도의 골격은 갖추었으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기관의 협의(협조)·협력, 사안별 대응을 위한 체계적, 효율적 대응은 미흡하여 도 각 부서와 시·군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충남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갈등의 진단·예방·조정·관리 기능을 담당 및 총괄하는 갈등관리팀(5급 1명, 6급 2명, 9급 1명)을 신설하고 공공갈등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

공공갈등의 기술검토,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갈등현안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기존 갈등현황의 점검과 모니터링 수준에서 벗어나,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③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 시·군 갈등관리조례에서는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갈등관련 전문가,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말 기준으로 6개 시·군(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이 갈등관

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④ 공공갈등 현안 정책연구

도·시·군의 주요 사업 중에는 갈등유발요인의 정책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갈등유발요인들의 적실성 및 정확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갈등영향분석 연구,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등을 수행, 갈등유발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지역주민 의식 파악, 쟁점 및 이해당사자 분류, 원인과 해결의 수단·방향등을 도출하고 있다.

⑤ 갈등관리 현장 지원

공공갈등 발생시 갈등사안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관리체계 수립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도 갈등관리시스템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군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합의형성과 역할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⑥ 갈등관리포럼 운영

충청남도 갈등관리시스템의 특징은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력파트너십 구축에 있으며, 2006년 10월 포럼 구성 이후 현재까지 민·관협력체제를 모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충남연구원 포럼 사무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갈등관리 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나 여러 제도와 재정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약을 위한 도·시·군의 역할과 기능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공공갈등관리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의 역할과 기능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갈등현안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진단 및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갈등현안 정보 및 갈등 해결 사례 매뉴얼 작성 등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 이후까지 정책추진의 전 단계에 걸친 상시적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도 필요하다. 충청남도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고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관리에 민·관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운영,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규제협상, 시나리오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조례에 의해 '갈등관리포럼'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포럼을 통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부분 전문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갈등 해결 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갈등 해결능력 배양 전문교육도 필요하다.

시·군의 역할과 기능으로 시·군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군별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각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갈등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자인 시·군은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로써 갈등전담팀 도입, 갈등관련 예산운영, 갈등영향분석 활용 등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의 갈등관리 교육참여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4. 마치며

협약을 통한 충청남도의 공공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약의 실행을 위한 도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대의 형성이다.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협약에 대하여 도와 시·군 모두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갈등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참여도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는 단순한 행정사무의 처리가 아니다. 사무의 대상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협약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기술적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의 확보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지역주민이 갈등의 중재 및 협의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갈등관리 기구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도, 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전

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며 재원부담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가 협약을 통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 협약은 갈등관리의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하는 분명한 의식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갈등관리와 해소에 충청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

